

濟州島研究 제15집(1998), pp.7~26

<특집: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Ⅱ>

地域研究로서 濟州學의 방법과 전망*

전 경 수**

I. 서언: 地域研究로서의 濟州學

제주학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학이란 용어가 안고 있는 의미의 범주 내에는 그것을 실현하려는 집단이 지향하는 일련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島研究會'에서 현재의 '學會'로 명칭을 변경한 제주학회와 관련된 저간의 사정이 그러한 의지를 반영한 일 부라는 인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학문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도 일종의 운동 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문운동이 시작하고 종결을 짓 는데에는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점도 있다.

* 본고는 제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1998년 11월 13일 - 14일, 제주 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발표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구도발 표시에 토론을 맡아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신 김영돈 선생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년 동안 나의 글에 대해서 주의깊게 읽고 문장을 검토하 고 지적해주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최규일 교수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지 만, 일부 수정 노력을 하였다.

지역학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학문이라는 입장을 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지역연구라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지역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의 경향으로 인식되는 것이 발생가능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 에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하나의 지역에 대한 연구를

1978년 봄에 제주도연구회가 탄생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제주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까지 이루어진 학문적인 성과가 민속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미약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와 열의가 결합되어서 제주도를 하나의 지역적인 단위로 설정한 연구회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제주도연구회에서 제주학회로 명칭이

하나의 學으로서 정리할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 뒤에 學이라는 단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Area Studies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지역연구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주도라는 하나의 특수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칭할 경우에는 제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라는 지역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된 하나의 단위로서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심주제를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설정한 제주학이 제대로 하나의 學으로서 성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법론이 부실한 제주학은 하나의 學으로서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제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정치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학이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제주학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면, 제주학의 기반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현재 제주학을 거론하고 있는 입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는 의지의 반영임과 동시에 제주도연구회에서 제주학회로 전환한 구도에 대한 성찰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이라는 구도를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제주학에 원용하려고 한다. 지역연구라는 것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는 입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도 지역연구는 제각기의 입장에 의해서 정의되고 또 재정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학과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일환은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시험하고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제주학이 살아남기를 강구하고 있는 필자는 제주학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정 및 첨삭하는 정도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전환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이 모임의 질적·양적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이라는 것의 성립을 선언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학문적인 업적을 축적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현된 의지를 실현하지 않으면, 제주학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됨은 당연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견을 같이 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이 최근에는 濟州學研究所라는 사단법인체의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한 점은 자못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간에는 地域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이 용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 용어가 사용되어온 것은 지리학 분야와 관련되어 학제적으로 발전시킨 Regional Science의 번역어로서 韓國地域學會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최근에 여러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 Area Studies는 일찍부터 하나의 '學'(discipline)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學들이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연구'해보자는 觀點(perspective)으로서 원용되어 왔다(전경수 1990). 따라서 지역이라는 현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중심주체로 하여 하나의 學이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Regional Science로서의 지역학이라는 번역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학이란 “공간구성을 이루는 요소 중 ... 물리적 환경이 아닌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들과 구분되는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학 연구이다”(俞浣 1985: 3)라는 지역학의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Regional Science의 번역어로, 지역연구는 Area Studies의 번역어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구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學이 성립하자면, 그것을 형성하는 중심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중심주체로 하여 성립된 學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Regional Science로서의 지역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현재 Area Studies의 의미로 지역이라는 것을 특수한 현상으로 고려하여 學에 적용시키는 것은 중심주체의 설정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행되고 있는 Area Studies의 내용은 항상 특수한 하나의 지역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추상화된 현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學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지역이 대상일 경우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의 단위일 경우에는 Area Studies의 범주내에서 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지역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된 현상이고, 보편적인 현상에 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국학은 지역연구(Area Studies)의 하나로서 존재의의를 담보받을 수 있다. 즉 지역연구라는 관점을 갖고, 하나의 특수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례로서 한국학이나 일본학이라는 용어의 존재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II. “넓히면 산다”: 廣域化의 구도

제주도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은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유배지 또는 “말이나 보내야 할 곳”으로 스테레오타입화 되었던 적이 있었다. 유배자들과 말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출륙금지의 명령이 떨어지던 곳으로서 또는 폭도중심의 반란지로서 인식되었던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인식의 종착점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들은 제주도에 대한 정체성이 육지 중심으로 만들어져온 결과의 산물임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제주도에 대한 인식의 틀은 점차적으로 제주도라는 섬이 만들어낸 땅의 면적으로 좁혀져온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도서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해양이라는 도서의 특징을 박탈당하고 육지에 부속된 땅으로서의 섬이라는 인식으로 극소화되어 온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기존의 제주에 관련된 인식들이 제주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제주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자연과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간에 제주도라는 섬이 구성하는 땅의 면적 내부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해양세계라는 해연관계의 연계를 생각하는 중층적인 광역화를 생각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체성이 더욱더 명확하고 주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섬 또는 도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양으로 연결된 세계의 열린 구도를 이해의 기본으로 삼

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의 열린 세계를 생각하지 않은 도서라는 것은 갇힌 곳일 수밖에 없다. 해양세계로서의 제주도는 열린 곳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제주도는 해양세계의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다. 동중국해의 무역로가 만들어낸 한 거점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점은 五銖錢(漢帝國 화폐의 일종) 출토지의 연속선상에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분명하게 이 '五銖錢 交易路'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삼별초의 군대가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에 거점을 마련하였고, 김통정의 항몽 삼별초 군대는 일본의 카마쿠라 정권에게 원병을 요청한 흔적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琉球國으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池田 1998: 17-18). 1477년 金斐 일행의 요나구니 표류사건도 동중국해에 왕래하던 교역로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해양세계를 무대로 하는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재검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元の 고려 강점기에는 탐라총관부가 제주도에 설치됨으로서,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고려라는 국가와 동격이 된 적이 있었다. 개성의 쌍성총관부와 제주의 탐라총관부가 각기 존재하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의 대몽관계에 대해서도 학문적인 관심이 뻗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에 제주는 대일교통의 창구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 동안에 제주도는 일본군 대본영이 지휘하던 최전방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과 연계된 현재의 재일교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對韓半島 관계 뿐만 아니라 對蒙 관계와 對日 관계를 구도상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자강에서 흘러내리는 담수의 영향으로 제주도 연안의 양식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본토와 제주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을 과제로 안게 된다. 이미 해류의 흐름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김구 교수 연구), 제주도의 바다는 중국대륙과 뿔레야 뿔수 없는 해연관계를 맺고 있다. 남태평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해역의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이용필, 이인규 교수 연구 등)들도 “黑潮文化”를 거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또는 해양물리화학적 기초가 되기도 한다. 동중국해 북부의 중심이 제주도라면, 동중국해 남부의 중심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유구열도다. 동중국해의 두 축은 제주와 오키나와인 셈이다. 우리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중국해의 생물상과 해양세계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東中國海의 文化와 環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와 오키나와를 연결한 동중국해의 중심에서 한반도와 중국대륙 그리고 일본열도 및 동남아시아의 연계관계를 보여주는 구도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되었었지만(한상복 1988), 제주도나 국내의 학계가 그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제주학이란...제주인들이 살아온 역사를 濟州島의인 관점에 서서 총괄적으로 재조명해보는 학문적 접근을 말한다...제주도적이라 해서 지역적으로 제주도에 국한시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 뜻하는 바는 本土, 東北 아시아 내지는 쏘 아시아 속에서 제주도적인 것을 찾지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창석 1988: 5). 제주도는 더 이상 반도의 말단에 붙어 있는 고립된 곳이 아니라 해양세계의 탄탄대로에 위치한 열린 곳이다.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은 당연히 제주도에 대한 기왕의 국제적인 관심과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밝히면 산다” 情報化의 실천

제주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제주도라는 지역과 연계된 것이기 위해서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현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학문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제주학도 정보화를 기반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주학의 방법론에 정보화라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제주에 관련된 정보의 종류들을 어떤 구도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제주관련 자료를 총망라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자료의 입력이 관건으로 작용한다. 제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제주대학 제주도문제연구소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노력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에 관련된 연구문헌 목록이 정리된 바 있었다(김영돈, 고남욱, 부만근, 신행철, 김태보, 허철수 1985; 김영돈, 신행철, 강영봉 1980; 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종 1981;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 1968). 현재로는 그만큼 목록화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연과학 분야의 문헌들이 좀더 광범위하게 망라된다면(이용필 1996), 우리는 제주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정보화된 자료라는 것들은 국제적인 호환성이 없는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제주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단계에서 우리는 관련자료의 영문화를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발간되는 자료들은 최소한도 영문초록이 반드시 첨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존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초록 정도의 영문화를 시도함으로써 제주도 관련자료들이 국제적인 호환성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제주학 정보화는 일단계 완성된 것이고, 다음 단계로는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화된 제주학 자료의 국제적 이용의 길을 틀 수 있다.

정보화가 제주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실천된 다음에 우리는 제주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차후의 종합학술조사를 기획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학술조사가 기획되기 전에 제주 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학 자료의 정보화를 생각하는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단법인 제주학회의 산하에 한시적으로라도 '濟州學 情報化 企劃委員會(가칭)을 출범시킴으로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제주학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기획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주학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행정이나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화의 작업에 필수적인 일차적인 작업은 한사람 한사람의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자신의 연구업적들을 집적하고 기획단에 제출한 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함으로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본구도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된 자료의 이용이라는 점에서 예상가능한 수요자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제주학 정보화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단법인인 제주학회가 예상 가능한 수익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학회에서는 그것을 위한 전단계의 계획서 작성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연망의 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생산과 그것의 유통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보화는 가공된 정보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 유통의 거점을 겨냥하게 된다. 이미 광역화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는 정보화와 결합되면서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逆으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거점을 요구할 수 있다. 對日, 對蒙, 對中, 對韓, 對東南亞 등으로 향하는 광역화의 거점들은 파트너쉽이라는 정신 하에서 정보화에도 필수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V. “뭉치면 산다”: 統合科學의 지향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을 축적하고 훈련을 받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제주도연구회를 시작할 당시와 지난 20년 동안 연구업적으로 축적된 <濟州島研究>誌에 게재된 논문들과 현재 제주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전공 배경을 일별해보면, 양적인 성장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6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모임이 2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논문집에 집중적으로 업적을 발표해온 연구자들의 숫자만 해도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질적인 변화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찍부터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주도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의와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역연구소로서의 제주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독특한 입

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의 단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역연구의 일반적인 추세가 사회과학 위주로 진행되어온데 반해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제주학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출발하였고, 나중에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가세한 모습을 보인다. 지역연구를 태동시키고 발전시킨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SSRC)가 중심이 되어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은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로 전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진행되는데에는 정책적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전쟁의 와중에서 국제적인 정책의 수립에 필수적인 분야라고 인식되어서 출발한 것이 미국식의 지역연구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식의 지역연구를 그대로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제주학의 경우는 정책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진 쪽에서 시작하였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순수학문 분야의 희망에서 시작되었고, 그러한 의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주학에 가세하면서 제주학은 제주도라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희망이 천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해양관계나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제주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물론 순수학문 분야의 자연과학적인 업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듯이 자연과학 분야가 제주학에 가담하면서, 제주학은 제주라는 지역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학문의 면모를 개척한 점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의 분류에 있어서 순수와 응용의 이분법은 사실상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다. 편의상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하에서 순수와 응용의 이분법적인 학문분류를 해온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분류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엄밀하게 적용해서, 순수와 응용의 경계점을 학문적인 성과로부터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수와 응용을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나타나는 연속선상의 양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연속적인 연계관계에 대한 인정은 가능하다. 양 극단에 관

한 인식은 분명하지만, 양자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영역에서 순수와 응용의 이분법적 적용은 받아들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행되고 있는 학문이라는 세계의 삼분법에 대해서도 필자는 동일한 궤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라는 분류를 기초로 각각의 양극을 대표로 내세운다면, 삼자의 특성에 의해서 분할구도가 가능하지만, 삼자간의 배타적인 엄밀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내적 성격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문학의 범주에서 심리학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을까. 물리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는 칼로 무우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영역이 나뉘어지는 것인가. 하물며, 사회과학이라는 것과 인문학이라는 것의 경계는 무엇인가. 언어학은 사회과학인가 인문학인가. 역사학은 인문학인가 사회과학인가. 우리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세분에 의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주도연구회’와 ‘제주학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연과학 분야가 일찍부터 연구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과학의 특성상 제주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논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가 된다. 문제는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분야가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제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의 조성에는 제주학의 범주를 인문·사회분야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의식들이 뿌리깊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연유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 제주도를 인식하는 틀로서 민속학적 입장을 옹립하는 경우에서부터(장주근 1984), 지역연구를 사회과학의 범주내에서 고려하는 인식으로 제주학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유철인 1996), 지역연구로서의 제주학은 대체적으로 자연과학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제주도연구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인 1988년에는 ‘국제화시대의 제주도 연구’라는 주제하에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5 논문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7 논문이 발표되었다. 자연과학 분야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주도 연구에 동

참함으로서 제주학은 필연적으로 통합과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한지붕 두가족 식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화학적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미래의 숙제로 두어야 할 부분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제주학회의 활동과 인원 구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자연과학 분야의 상대적인 소극적 참여현상은 구성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조건들이 상당한 정도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위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분리되어 있는 학문의 편의적 분할 구도를 지역연구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은 이미 세계의 학계에 제시되어 있는 통합과학의 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제주의 潛嫂라는 주제를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전경수 1997). 이러한 가능성은 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진성기 선생이 일찍이 '제주도민과 말(馬)'에 대해서 짙막한 글을 발표한 바 있고(진성기 1984), 강민수 교수가 '제주 조랑말에 관한 한일 연구동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강민수 1988). 우리는 이 두 영역의 결합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사고를 시도해보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石甫明 선생은 혼자의 힘으로 제주도의 인문·사회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밀도있는 연구결과를 여섯 권의 <濟州島叢書>로 제시해준 바 있다. 물론 당시 석주명의 연구결과가 두 분야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는 아니다. 현재 상태만을 고려하더라도, 제주학은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가 균형을 맞추어서 이끌어가야 하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두 분야의 화학적 결합상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인문사회분야의 文化와 자연과학 분야의 自然은 共進化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Durham 1991), 그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달성가능한 부분이 있다.

우리 후학들은 그러한 결과를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주학으로부터 비롯된 고유의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제주학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셈이 되고, 우리 자신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셈

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당하고 만다. 통합 과학의 인식틀 속에서는 순수와 응용의 분할도 불필요한 것이다. 분할보다는 통합에 의해서 현상의 이해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 통합과학의 정신이기도 하다.

통합과학을 지향하는 제주학의 실천 방안으로 필자는 제주도에 관한 綜合學術調查를 제안한다. 이것이 통합과학을 실천함으로써 제주학의 방법론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연구라는 것은 거의 사회과학의 독점물로 인식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함께 통합과학을 지향하는 정신의 구현이라는 틀 속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방안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생각하게 된다.

제주학회의 회원 구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제주학이라는 틀 속에서 통합과학을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과 역량의 부족으로 그러한 잠재력의 가능성을 유도해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다. 통합과학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시도의 순간에 제주학은 학문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지역연구를 선도할 수 있기도 하다.

제주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는 여태까지 두 번 시행된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조선산악회장과 국립민족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宋錫夏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해방직후 혼란기 미군정청이 지원과 후원을 하였던 1946년도(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학술조사였다(Knez 1997: 26). 조선산악회의 회원들 중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답사에 관련된 한건의 보고서도 대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시도하였는지, 또는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해지는 사진과 약간의 기록에 의해서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의 종합학술조사는 1959년도에 실시되었던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라는 이름의 행사였다. 당시 아세아재단의 기금 일천만원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저명한 교수(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들)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학술조사였지만, 이것도 후일 종합보고서를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분야별로 약간의 보고서들이 출판된 것들은 존재한다 (한상복 1986).

상기 두 번의 종합학술조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양자는 그 행사의 결과를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두가지 행사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제주는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지, 전혀 주체적이지는 못했다. 상당한 경비를 사용하고도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은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 제주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주도종합학술조사는 통합과학의 정신에 입각해서 제주도라는 지역에 관한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계관계의 설정 위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연구업적들의 물리적인 열거로서 종합학술조사를 시도한다는 것은 통합과학의 실천이라고 볼 수 없다. 계획에서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물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분야별 연계관계의 구도를 달성하려는 의지의 확보를 전제로 종합학술조사는 기획되어야 하며, 그러한 진행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제주학의 방법론을 구현함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의 지역연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기의 방안을 제시하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통합과학의 정신을 완결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 정신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사람을 생각하면 산다”: 住民中心의 정신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연구들의 대부분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거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곳의 특수한 목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기의 지역연구들은 순전히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상당한 부분은 군사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개발정책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비 지급이라는 명목하에 일종의 고용계약을 맺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동원되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것이 70년대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에서 수행되었던 지역연구의 대체적인 윤곽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과학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人本化의 부재와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자연과학이란 것의 존재의미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과학적인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고 인본화에 역행한다면, 진리탐구를 겨냥하는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그러한 경향을 거부해야 한다. 하나의 특수한 지역이라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장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역연구의 인본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삶을 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에서라도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자원의 착취대상으로서 지역이나 주민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착취하는 속임수의 연구들이 빚어낸 과정과 결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지역연구는 본질적으로 실천에 있는 것이고, 올바른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유리된 지역연구는 연구결과의 수혜자에서 주민을 제외하게 마련이다. 주민과 지역을 괴리시키는 연구는 연구결과의 수혜대상을 엉뚱한 곳으로 설정하게 마련이다. 여태까지의 지역연구들이 거의 모두 주민과 지역을 괴리시킨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제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제주의 삶이 질적으로 제고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은 제주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주민생활에 공헌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학의 목표설정과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주민중심의 정신으로 귀결해서 숙고되어야 한다. 최근에 찾아지고 있는 NGO적인 성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활동과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천적인 목적을

지상과제로 하는 지역연구라는 입장을 생각하면, 학문과 비학문의 의도적 경계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학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중심의 제주학은 당연히 제주도인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즉 주민참여의 제주학이 연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학회는 그러한 작업의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학회의 실체를 사단법인화하였다. 제주도에 등록된 사단법인체로서의 제주학회는 제주학회 회원들이나 소수의 특정 연구자들만의 것일 수 없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제주학회임을 천명하고 있다. 법인체로서의 제주학회가 해체할 시점에서 학회의 모든 재산은 제주도로 귀속된다는 점이 제주학회의 궁극적 소유주가 도민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학의 연구방향은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고,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에도 분담이 생길 수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과 연구를 위한 행정과 기금 마련의 주체 그리고 자료제공에 가담해야 할 주체들도 명확해지는 것이다.

연구자나 연구 그 자체를 위한 제주학이 아니라 제주의 주민을 위한 제주학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분명하게 제시될 때, 행정과 산업 그리고 주민들의 제주학에 대한 인식과 자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의 제시가 제주학회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도민에 의한 제주학의 가능성은 먼저 도민을 위한 제주학의 대안과 과정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서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道民株로 꾸려진 언론사의 한 사례는 제주학회가 본받을 점이 있다. 지방화의 시대에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학이라는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겨냥하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VI. 결어: 濟州를 위한 濟州學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경계를 생각하는 국내 또는 국제라는 구도는 제주도의 이해에 지극히 제약점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경계에 대한 이해가 여태까지 제주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침이었다면, 이제

는 문화적인 환경적인 경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해의 영역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좁게 만들었다면, 문화와 환경적인 이해의 영역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게 만들 수 있다.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넓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를 넓게 인식하는 것이 제주학의 기본정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제주도를 살리는 길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제주학의 방법론을 위한 '마인드'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이 마인드가 제대로 잡힌 연후에야, 제주학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마인드만이 인프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학은 지역연구의 일종이다. 지역연구로서의 제주학의 중심주제는 제주다. 그 방법론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여, 필자는 제주학을 위한 네가지의 전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광역화("넓히면 산다")로서, 제주라는 문제의식을 정치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열린 해양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인식지평의 제고를 요구한다. 육지의 말단에 부속된 간헐 섬으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동중국해의 구심점으로서 인식되는 지도를 재확인하자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연대를 사례로 들어볼 때, 이러한 문제는 가상이 아니라 실재다. 제주학의 방법론을 논함에 있어서 광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는 해양세계다.

둘째는 정보화("밝히면 산다")로서, 미래의 제주를 생각함에 있어서 제주에 관한 제대로 된 지역연구인 제주학은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기피할 길이 없다.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없는 지역연구는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만 되풀이되는 제주학은 허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학문분야별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제주학 정보화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제주학의 생명선이기도 하다. 제주학의 방법론을 논함에 있어서 정보화를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다.

셋째로는 통합화("뭉치면 산다")로서, 기존의 학문영역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통합과학의 정신을 구현하는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라는 곳, 삶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 제주에 자연과학적인 제주가 따로 있고, 사회과학적인 제주가 따로 존재하고, 인문학적인 제주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으로서의 실체는 하나의 큰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학

문이나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경을 앞세워서 제주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총체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를 분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주의 총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생산할 개연성이 높다. 제주학의 방법론을 논함에 있어서 통합화를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는 통합과학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연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가 함께 구성하는 쌍두마차를 구비하는 것이고, 제주학에서 그 모범을 보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삶이라는 현실을 기초로 하는 제주학으로부터 우리는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로는 주민화(“사람을 생각하면 산다”)로서, 제주학의 근본 정신은 제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학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제주이고, 제주학 연구의 결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착점은 제주일 수밖에 없다. 제주학의 방법론을 논함에 있어서 주민화를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는 도민중심이다. 연구자들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적시하고 함께 논의를 해나가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학을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제주학은 도민이 키워나가는 구도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탐라 멸망 구백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위상의 제주도 인식과 문화 및 환경적인 위상의 제주도에 대한 대비라는 구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볼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다. 제주도의 정치적 독립은 이미 화석화된 인식이지만, 제주도의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독립은 앞으로의 인식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로 쪼들어진 과거를 문화와 환경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미래의 제주도가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행정에 문제가 있고, 제주의 산업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 제주학 연구자들은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행정이나 산업이라는 것들의 주체들은 모두 실천자들인데, 실천자들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제주학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연구노력의 부족에서도 기인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라는 공동체내에서 제주인의 삶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연구자들만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제주도 보다도 면적이 적고 인구수가 적은 나라가 부지기수다.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연구자들이 매진하고 있는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제주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과정과 결과물들이 제주인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제주인의 일상생활에 닿아 있는 연구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

주민과 지역이 통합된 지역연구의 표본으로서 제주학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된다면, 우리는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의 모습을 만방에 선전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지역연구의 모델이 제주학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주도를 위한 제주학회의 입장에 대한 선언과 실천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지역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그것이 제주학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지역연구에는 왕도가 없다. 쌍두마차가 가는 천리길의 첫걸음이 왕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민수

1988 “제주 조랑말에 관한 韓日 연구동향”, 『濟州島研究』 5: 119-130.

高昌錫

1998 “卷頭言”, 『濟州學』 창간호: 5-6.

김영돈, 고남옥, 부만근, 신행철, 김태보, 허철수

1985 “해방후 제주연구 개관(III): 사회과학 분야”, 『탐라문화』 4: 271-427.

김영돈, 신행철, 강영봉

1980 “해방후 제주연구 개관: 어문학, 민속분야”, 『탐라문화』 1: 185-235.

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중

1981 “해방후 제주연구 개관(II): 역사, 고고분야”, 『탐라문화』 2: 285-328.

俞浣

1985 “地域學의 定義와 再照明”, 『地域研究』 1: 3-7.

유철인

1996 “지역연구와 濟州學: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13: 33-52.

이용필

1996 “濟州 自然科學의 研究와 評價”, 『濟州地方學의 연구과 발전방안』 (’96 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pp. 57-129.

장주근

1984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제주도”, 『濟州島研究』 1: 7-18.

전경수

1990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론”,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연구』, pp. 19-46,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편.

1997 “濟州學: 왜, 어떻게 할 것인가?”, 『濟州島研究』 14: 19-33.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

1968 『제주도문헌목록: 인문·사회과학 분야』, 제주: 제주도문제연구소.

진성기

1984 “제주도민과 말(馬)”, 『濟州島研究』 1: 425-430.

한상복

1984 “제주도 종합학술조사(1959) 개요”, 『濟州島研究』 1: 293-322.

1988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 인문·사회과학 분야”, 『濟州島研究』 5: 3-11.

池田榮史

1998 “物質文化로부터 본 韓琉의 交流”, 『朝鮮王朝와 琉球王朝의 歷史와 文化 再照明』 (명지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제1회 沖繩國際學術會議) pp. 12-25.

Knez, Eugene

1997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Durham, William

1991 “*Coevolution: Genes, Culture, and Human Divers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